

중앙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본 2021 인천시 정책방향

채은경 / 전략분석팀장
이광호 / 전략분석팀 연구원

배경과 목적

- 2021년 중앙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 분석을 통하여 인천의 직접 현안과제를 확인하고 주요 핵심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중앙정부 업무보고를 전략적 방향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인천광역시 2021년 주요업무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필요
- 코로나19, 탄소 중립, 한국형(인천형) 뉴딜 등 중앙정부 및 인천시의 정책 키워드에 따른 세부 과제 재구조화와 이의 실천을 통한 정책목표 달성 노력

정책제안

- 중앙정부 업무보고 중 인천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 대응 요구: 스마트 물류 사업, 부리산업 관련 정책, 스마트관광도시, 경제자유구역 사업, 대체매립지, 철도 및 도로 정책 등
-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등 관계부처 합동정책 대응에 대해서는 우리 시 내부에서도 협업 행정체계 구축이 필요한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이와 연계하여 사업 추진 필요
- 현재 인천시 주요 업무계획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앙정부의 지역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담당부서를 지정함으로써 선제적 대응 필요
- 뉴딜 사업,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등의 인천 주요 추진 사업들에 대하여 중앙정부 정책 모니터링을 지속함으로써 연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1 필요성과 목적

-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겸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시작으로 국가보훈처, 법제처, 문화체육국 등 2021년 각 부처별 업무보고 실시
 - (2021년 경제정책방향)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천명하며,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한국판 뉴딜 등을 발표
 - (국가보훈처 등 2021 주요업무계획 발표) 1월 1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국가보훈처,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1~3월까지 30개 각 부처에서는 2021년 회복, 포용, 도약의 세 가지 키워드로 정부 업무보고 실시
- 인천시 역시 각 실·국·본부의 주요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2021년 인천시 주요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
- 본 브리프에서는 중앙정부 업무보고와 인천시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인천시 정책방향 및 과제 재점검
 - 코로나19 극복, 뉴딜 정책, 탄소 중립 정책, 시민의 삶의 질 4가지 방향에서 중앙정부 각 부처 업무보고 내용과 인천시 주요 업무계획 분석
 - 2021년 중앙정부 업무보고와 인천 업무계획을 통하여 인천의 직접 현안과제와 함께 중앙정부 지역 과제를 확인하고 시의 전략적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

[그림 1] 인천시 정책방향·과제 재점검



2 2021년 정부 주요업무계획

1) 인천 관련 추진과제

□ 중앙정부 업무 추진에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직접 영향 사업

- (산업·경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첨단 부품소재산업 관련기업, 연구시설 등 유치 추진으로 4차산업의 선도기지로 도약을 추진, 뿌리산업의 활성화로 일자리 및 경제활성화 선순환 구조 정착을 도모
- (공항·항만) 인천공항에 첨단 IT기술을 접목하여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위한 스마트방역 체계를 구축, 중국·인도의 신선시장 규모 확장에 대응한 콜드체인 물류시설 활성화 필요
- (도시·환경)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로 해법 마련을 위한 매립 가능 조건 강화와 특별지원금 지원 등을 제시, 검단·계양·영종 등 기존 주택공급계획 추진으로 주택시장 및 주거안정 도모

[표 1] 인천관련 추진과제

핵심 추진과제	해당 부처	비고
(항만배후단지) 인천항 전자상거래 콜드체인 특화구역 활성화 및 특화구역 신규 지정(부산 목포항 등), 주요항만의 배후단지 확충, 유통기업에 수출입 실적 관계없이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부여 및 우선입주 지원, 선박연료공급업, 선용품공급업, 항만용역업 등 경쟁력 향상 종합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인천항
(해양문화) 국립 인천해양박물관, 미래해양과학관(청주) 조성 추진(~'25)	해양수산부	인천항
(스마트물류) 인천항·부산항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추진, 부산항 블록체인 플랫폼('컨'반출입 배차시스템 등) 고도화 및 인천항에 도입	해양수산부	인천항
(공항) 항공기 방역수칙 강화 및 인천공항 스마트방역 시스템 구축('21.上), 감염병 확산 단계별 검역체계를 구축(T2, ~'22)하여 방역체계 효율화	국토교통부	인천공항
(일자리) 인천 뿌리산업 공정 자동화·기술혁신 컨설팅 및 맞춤형 입직 지원 등	고용노동부	뿌리산업지원
(스마트관광도시) '지능형 관광도시' 육성('20년 인천→'21년 3개 추가 선정, 132억원), 지역이색회의명소 40개 지정, 12억원),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20억원) 등 국제회의 관련 관광 지원(특색 있는 관광지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
(어촌 어항 재생) 어촌뉴딜 신규 60개소 기본계획 수립, 기존 190개소 조기 착공 준공, 도서지역 지원으로 국가보조항로 준공영제 항로 공공성 제고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
(대체 매립지) 반입총량제 강화, 폐기물 반입 60% 감축(~'26) 등 지원	환경부	수도권 매립지
(대체 매립지 공모('21.1~4월)·지자체 협의를 통해 대체 매립지 해법 마련	국토교통부	검단·계양·영종 등
(기존 주택공급계획) 수도권 공공택지 84.5만호,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수도권 127만호 주택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국토교통부	GTX B
(철도) GTX A노선('23년말 개통), B노선(제안요청서 고시, '21.12), C노선(실시협약 체결, '21.12) 등 수도권 광역철도를 차질없이 확충	국토교통부	-
(도로) 수도권 횡단축(계양강하 타당성조사,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예타신청), 제2순환망(파주~포천 등 7개구간) 구축('21.11) 등 대도시권 간선도로 확충	국토교통부	-
(경제자유구역) 9개 경제자유구역을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751억원)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경제자유구역

자료: 각 부처 주요업무계획 참조

2) 부문별 주요 추진과제

◆ 코로나19 이슈 관련 과제

- (피해지원)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에 저금리 융자지원, 자금지원, 임대료·연체이자 감면 연장 등 긴급피해지원. 피해기업·소상공인의 애로사항 직접 청취 및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고 상시 점검
- (고충해소) ‘기동해결 특별 컨설팅’, ‘국민고충 긴급대응반’ 운영으로 기업, 민원 등 즉각적인 해결체계 가동을 추진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확대로 민원 특성에 따른 전문화된 고충·민원을 처리·해결
- (공공의료) 지역 완결적 의료여건 조성(책임의료기관, 지역책임병원 육성 등), 지역 감염병 의료 대응, 지역 중심 응급의료 대응 등 지역 의료 역량 강화로 필수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 (일자리)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여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확대, 공공의료 강화 등 신규 일자리를 발굴함. 기존 일자리 수 위주에서 양과 질을 균형적으로 반영한 평가체제로 개선

[표 2] 코로나19 이슈 관련과제(1)

핵심 추진과제	해당 부처	비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소득안정자금 등 지원	기획재정부	설 이전 추진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점검반 운영, 피해기업 지원	금융위원회	-
디지털 역량교육을 위한 디지털배움터 1,000개소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 정책
도서관, 주민센터 등 공공 와이파이 1.5만개소 신규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 정책
중소기업 밀집지역 대상 ‘기동해결 특별 컨설팅’운영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충 청취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고충 긴급대응반 운영을 통한 코로나19 등 현장민원 대응	국민권익위원회	-
지자체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확대 지원	국민권익위원회	지역 정책
필수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책임의료기관(권역 3, 지역 6 추가 1분기), 지역책임병원(10개 시범사업, 하반기) 육성	보건복지부	지역 정책
권역 내 감염병 위기 대응 조정 및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전담 권역감염병전문병원(20년 3개소→21년 4개소) 확대 추진	보건복지부	지역 정책
(가칭)중증응급진료센터 신설(70개 중진료권별 1개 이상, ~ 25년)	보건복지부	지역 정책
70개 진료권별 지역심뇌센터 1개 이상 지정(70개, ~ 25년)	보건복지부	지역 정책
읍면동 주민건강센터 확충(20년 120개소→21년 156개소)	보건복지부	지역 정책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 대응 미래 일자리 발굴(21년 목표 6.3만개)	보건복지부	-
양로,장애인 시설 IoT 활용 돌봄 기기 설치 확대(21년 5천명)	보건복지부	지역 정책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이용 우수업소 인센티브 부여	식품의약품안전처	-
문화콘텐츠 피해기업 재기지원자금 신설, 영화인 직업훈련 수당 지원 (250억원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 취약계층인 아동복지시설 등 시설 및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수영장 포함 국민체육센터(55개소), 소규모 체육관(37개소), 학교부지활용국민체육센터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정책

자료: 각 부처 주요업무계획 참조

[표 3] 코로나19 이슈 관련과제(2)

핵심 추진과제	해당 부처	비고
코로나 취약업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 및 훈련 검토	고용노동부	-
비대면 유연근무 확대(간접 노무비 21천명, 인프라 구축 최대 2천만원, 재택근무 컨설팅 400개소)	고용노동부	-
국토교통기술로드맵(21.3) 등 UAM(도심항공모빌리티) 기술개발, 드론배송 조기 상용화(21.12) 등 K-드론 브랜드기업 육성, MRO(유지·보수·운영) 산업 지원	국토교통부	지역 정책
소상공인 일터, 전통시장 스마트 기술도입	중소벤처기업부	-

자료: 각 부처 주요업무계획 참조

● 뉴딜 이슈 관련 과제

- (뉴딜확산)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추진과 동시에 지역경제정책-뉴딜을 연계 강화한 사업을 본격 추진함, BIG3(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등) 산업의 체감 가능한 성과창출을 위한 집중 점검 및 육성함.
- (디지털전환) 산업데이터 활용기반으로 미래차·가전·헬스케어·조선 등 10대 분야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함. 산단통합관제센터 구축, 산단스마트 물류체계 조성 등 스마트그린산단을 중심으로 주력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 (일자리) 고용 회복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일자리 기회를 확대함. 고용충격이 가장 큰 청년·여성 등의 비경제활동 인구로 유입 및 고착화 예방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함.

[표 4] 뉴딜 이슈 관련과제

핵심 추진과제	해당 부처	비고
인센티브 지원 등 지역균형 뉴딜 확산,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등 BIG3 산업 집중 점검 및 육성	기획재정부	지역 정책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신규 선정한 6대 플랫폼과 신규 30개 센터를 통한 데이터 공급을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 조성, 민간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바이오헬스 정책 추진력 강화, 제약산업 전문인력 육성 기반 내실화	보건복지부	지역 정책
중소기업 등 가명처리·결합 기술지원을 위한 가명 정보 활용지원센터 구축(21년 2개소 → '22년 이후 단계적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50년까지 무탄소 선박의 단계적 완전 상용화를 위해 기술개발 보급 및 국제표준화 추진(산업부 협업)	해양수산부	-
분야별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수집 연계, AI 분석 활용이 가능한 빅데이터 플랫폼 및 해양공간지도 구축(~'22)	해양수산부	-
비대면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가상·증강 등 실감형 및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창작·제작 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
30.5조원 규모 일자리 예산 신속 집행, 지역주도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연계·지원	고용노동부	지역 정책
간접노무비, 인프라 구축비, 재택근무 도입 컨설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비대면유연 근무 도입·활용 촉진	고용노동부	-
산업데이터 활용기반으로서 10대분야 데이터 플랫폼 구축, 스마트 그린산단을 중심 주력 제조업 디지털 전환 지원 등 민간투자 견인	산업통상자원부	지역 정책
바이오 원료대체 및 재활용 등 친환경 대체자원 확보	산업통상자원부	-

자료: 각 부처 주요업무계획 참조

● 탄소중립 이슈 관련 과제

- (녹색금융) 녹색분야 산업·사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비중을 확대, 정책형 뉴딜펀드를 마중물로 녹색투자 확대를 유도함. 녹색분야 전환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 수요 지원 등)
- (쓰레기·폐기물) 해양기인·육상기인 쓰레기 발생원 저감 노력으로 친환경 대체 부표·어구 보급 및 단계적 사용 의무화, 플라스틱 사용 규제 확대·강화 추진 등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를 확립함. 지자체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 법제화(타지역 폐기물 반입협력금 도입), 직매립 금지 법제화, 전처리·소각시설 확충 등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이행
- (스마트 그린도시·산업단지) 스마트 그린도시 시범사업 본격 추진, 탄소중립 그린도시 확장으로 지역 그린뉴딜을 지원함.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성방안 발표,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기준, 지정절차 등 세부기준 마련, 노후산단 기반시설 정비, 에너지 고효율, 스마트공장 등 부처협업을 통해 노후산단 대개조 사업계획 확정 및 추가선정

[표 5] 탄소중립 이슈 관련 과제(1)

핵심 추진과제	해당 부처	비고
탄소 중립 단계 도달을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 검토 및 분야별 세부 정책 과제 마련 등 추진	기획재정부	-
정책금융 중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 확대('19년 6.5% → '30년 13%), 정책형 뉴딜펀드를 통해 시중자금의 녹색투자 확대 유도	금융위원회	-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촉진법」 제정, 탄소중립 R&D 기업 참여 유도 및 연구인력 확충 방안 마련('21.上)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핵심기술 확보, 연구기반 고도화, 바이오-첨단기술 융합 등 K-바이올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민원 빅데이터 분석, 개방확대, 연계강화 등 데이터 활용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선도	국민권익위원회	-
「제2차 농업·농촌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발표, 축산, 벼농사 중심의 농업분야에서 저탄소 농업 실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 부표·어구 보급 및 사용의무화와 정부·지자체 의 하천쓰레기 해양유입 차단 협조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 시스템 확립	해양수산부	지역 정책
지자체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 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전처리·소각시설 확충 등 매립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법제화, 로드맵 마련	환경부	지역 정책

자료: 각 부처 주요업무계획 참조

[표 6] 탄소중립 이슈 관련 과제(2)

핵심 추진과제	해당 부처	비고
국가적응대책과 연계한 '광역지자체 적응대책 수립가이드' 마련 및 '적응대책 이행점검 체계' 구축 추진('21.2~) 등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환경부	지역 정책
녹색산업·기술 혁신으로 일자리 창출(기후·환경 R&D 기획·발굴, ICT·AI 기술 기반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	환경부	-
스마트 그린도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등 본격 추진으로 탄소중립 선언 지자체 확대 및 계획수립 예산 지원	환경부	지역 정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그린 리모델링 대폭 확대('20년, 1만호 → '21년 8만호), 저출산·고령화 맞춤형 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
기반시설 정비, 에너지 고효율, 스마트공장 등 부처협업으로 노후산단 대개조 사업계획 확정 및 추가선정	국토교통부	-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방안 발표('21.3),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기준·지정절차 등 세부기준 마련	국토교통부	-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본격화(신규 3개 선정), 스마트그린산단 중소·중견사업장 등 대상 FEMS 설비 구축 비용 지원('21년 204.3억원, 181개소)	산업통상자원부	-
주민참여, 지역주도, 산업간 공존, 지역지원 등을 통한 탄소중립 에너지 혁신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
수소도시 시범도시의 주요 인프라 설치 본격화('21.4), 수소도시법 제정('21.6), 제로에너지건축 중장기 추진방안 마련 등	국토교통부	-

자료: 각 부처 주요업무계획 참조

◆ 시민 삶의 질 관련 지역정책

-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기기 활용, 생활 서비스 온라인 활용 등 교육을 위한 디지털배움터 본격 운영으로 소외된 계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함. 언제·어디서·누구나 쉽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안정된 인터넷 서비스 제공
- (사회적 가치 제고) 한국판 뉴딜, 공공의료 등 필수분야 인력충원 지속, 청년취업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체험형 일자리 규모 확대, 공공기관-지역사회-주민-지자체간 협업과제 추진을 통한 혁신 시너지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돌봄서비스 확대) 지역 주민 주도 돌봄공동체 확대,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 양육공백 해소, 시·군·구간 서비스 이용의 원활한 연계(기존 주소지 내 돌보미 이용→개선 시도 내 아이돌보미 탄력적 연계)

[표 7] 시민 삶의 질 관련 지역정책

핵심 추진과제	해당 부처	비고
필수분야 인력 충원, 청년취업, 지역경제 활성화 등 코로나 극복 및 사회적 가치 제고 노력 지속	기획재정부	-
청년의 주거금융비용 절감 및 목돈마련을 위한 금융상품 출시, 공공부문 중심의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 및 지원	금융위원회	-
디지털 역량교육, 인터넷 접근성 제고, 인터넷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으로 소외된 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500개소)에 대해 급식관리 서비스 지속 제공, 장애인 급식위생지원 등 지원범위 확대(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역 정책
농업활동과 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회적농장 확대(30→60개소) 및 지역단위 돌봄모델 발굴(2개소)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정책
어촌뉴딜 신규 60개소 기본계획 수립 등 신속 추진, 도서지역 여객선 운항 지원, 독도 무인도서 관리 강화 추진 등	해양수산부	지역 정책
수돗물 사고대응 지원을 위한 유역지원센터 본격 운영(21~), 수돗물 유출 재발방지를 위해 정수장 방충시설 설치	환경부	-
1천톤/년 이상 사용 화학물질 등록,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자발적 협약·안전관리 강화	환경부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등 조성 지역 유희공간의 문화공간화 추진 등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정책
시·군·구 간 아이돌보미 수급 조정과 지역 간 서비스 이용의 원활한 연계 위한 '광역지원센터' 시범 운영(2개소, 12월)	여성가족부	지역 정책
공공이 주도하여 25년까지 도심 내에 양질의 부담가능한 주택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를 추가 공급	국토교통부	지역 정책

자료: 각 부처 주요업무계획 참조

3

2021년 인천 실·국 주요업무계획

1) 코로나 극복 및 인천형 뉴딜 정책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

● 코로나19 이슈 관련 과제

- (보건·의료) 권역책임의료기관 선정,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병원 간 진료정보 교류, 협력모델 개발 등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전준비 철저(접종기관, 접종우선 순위 등 중앙정부의 세부 운영 로드맵 준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실시 및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철저
- (관광산업) 관광기반 강화로 인천 핵심관광 육성, 관광산업 혁신과 질적 성장을 위한 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인천 웰니스 관광지 및 인천대표 관광명소 육성, 코로나19로 침체된 인천 관광·마이스산업 안정화, 관광·MICE업계 지원

[표 8] 코로나19 이슈 관련 과제

핵심 추진과제	해당 부처	중앙정부 연계과제
관광기반 강화로 인천 핵심관광 육성 코로나19로 침체된 인천 관광·마이스산업 안정화	문화관광국	문체부 지능형 관광도시 육성 사업과 연계
필수의료문제 개선을 위한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 코로나19등 질병의 선제적 예방사업 추진	건강체육국	보건복지부 권역감염병전문 병원 과제 연계

자료: 각 실·국 주요업무계획 참조

● 뉴딜 이슈 관련 과제

- (사회·경제) 소상공인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지역거점시설 확충 등 공정경제 실현, 고부가가치 인천 특화형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인천형 뉴딜사업 연계로 현안 해결과 미래 먹거리 산업 기반 조성
- (특화산업) 바이오·헬스케어분야 기업유치 및 산·학·연·병 바이오 혁신생태계 육성으로 K-바이오 메카 위상 확보, 항공정비(MRO) 단지 조성 및 항공정비 공용장비 센터 구축, 수도권매립지내 국가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및 인증센터 등 구축
- (산단고도화) 산재된 공장의 집적화를 통해 균형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 자족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친환경 산업단지계획 수립 추진

[표 9] 뉴딜 이슈 관련 과제

핵심 추진과제	해당 부처	중앙정부 연계 과제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성장기반 확충 사회적경제 생태계 강화 및 공정경제 실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천형 뉴딜, 바이오 헬스밸리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대전환	일자리경제본부	기재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활용 과제 및 지역균형뉴딜 확산 과제, 과기부 데이터 플랫폼 등 과제, 고용노동부 30.5 조원 일자리예산 집행 등, 보건 복지부 바이오헬스 생태계 조 성 사업, 산업통상부 스마트 그린산단 등 과제 연계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확대 조성 신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혁신창업 인프라 구축	경제자유구역청	해수부 어촌뉴딜 600개소 과 제, 국토부 K-드론 기업 육성, MRO 산업지원 등 연계
항공정비(MRO) 특화단지 조성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 실증·특화도시 기반 구축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한 어촌·어항 재생	해양항공국	환경부 유역지원센터 관련 사 업 연계
ICT기반 상수도 인프라 구축	상수도사업본부	산업통상부 및 국토교통부 스 마트그린산단 사업 연계
신규 산업단지 추진 시민 맞춤형 디지털지적 구축	도시계획국	

자료: 각 실·국 주요업무계획 참조

2) 탄소중립·매립지종료·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

● 탄소중립 이슈 관련 과제

- (해양쓰레기) 해양쓰레기 관리방안 전환,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련 연구(데이터 구축, 재활용 활성화 등), 시민단체·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해양쓰레기 유기적으로 대응
- (매립지종료)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대책 수립 및 피드백을 통한 문제점 해결. 친환경 자체매립지 부지 확보와 더불어 주민협의체 구성으로 주민 수용성 제고 노력. 배출자의 감축노력과 더불어 시민참여 확산, 재활용 배출, 수거체계 개선을 통한 순환경제 실현
- (탈석탄·신재생에너지) 영흥 1. 2호기 조기폐쇄 등 탈석탄 전략 수립,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으로 탈석탄·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 추진

[표 10] 탄소중립 이슈 관련 과제

핵심 추진과제	해당 부처	중앙정부 연계 과제
해양쓰레기 관리 방안 전환, 재활용 활성화 등	해양항공국	해수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 시스템 확립과제 연계
인천형 그린뉴딜 전략적 추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탈석탄·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 추진 자원순환체계 혁신 및 대전환	환경국	환경부 지자체 폐기물 발생지 책임정책 등, 광역지자체 적응 대책 수립가이드 마련, 탄소중 립 그린도시 사업 연계

자료: 각 실·국 주요업무계획 참조

● **시민 삶의 질 관련 지역정책**

- (문화·관광) 국내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한 인천형 특화상품 발굴, 관광·MICE 산업 안정화를 위한 관광기업 지원, 전문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 등 필요.
- (삶의 질) 인천도서관 건립, 생활SOC 사업과 연계한 도서관 건립 등 시민중심 생활밀착형 도서관 조성 필요.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추진
- (복지) 어르신, 장애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한 복지시설, 지원시설 확충 및 인프라 구축. 어르신, 장애인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한 특화사업 시행과 더불어 신규사업 발굴

[표 11] 시민 삶의 질 관련 지역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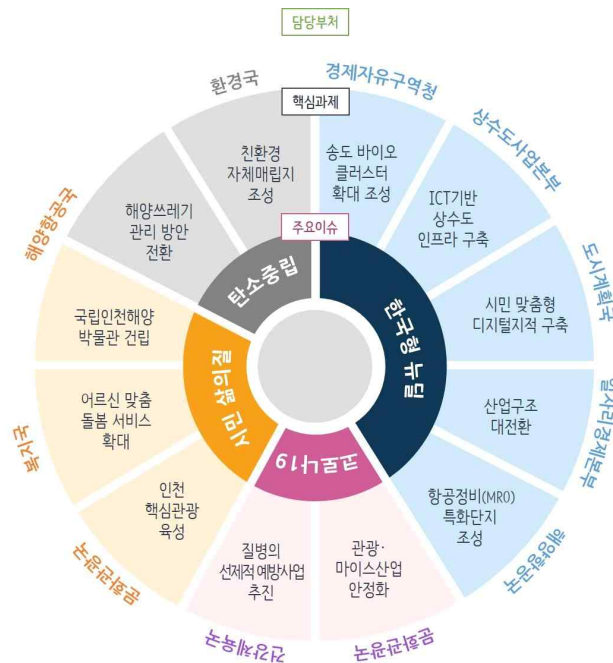
핵심 추진과제	해당 부처	중앙정부 연계 과제
시민 중심 생활밀착형 도서관 조성 관광기반 강화로 인천 핵심관광 육성 코로나19로 침체된 인천 관광·마이스산업 안정화	문화관광국	문체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 센터 및 유희공간 문화공간화 사업 등 연계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	해양항공국	해수부 인천해양박물관 조성 추진사업 연계
인천형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확대 장애유형을 반영한 장애인 돌봄서비스 확충 어르신 일자리창출·활성화로 소득지원 장애인 일자리 및 직업재활시설 확충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 일자리, 장려금 지원	복지국	보건복지부 양로시설 IoT 활용 돌봄기기 관련 사업, 식약처 노인복지시설 급식관리서비스 지속 지원, 여가부 아동돌보미 광역지원센터 운영 사업 연계

자료: 각 실·국 주요업무계획 참조

4 결론

-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 발표한 업무보고 중 인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추진 과제에 대해서 구체적 대응 필요
 - 해양수산부-인천항만공사와 연계된 항만배후단지와 스마트 물류 관련 과제에 모니터링 지속화
 - 산업 및 관광 분야에서는 부리산업, 스마트관광도시 경제자유구역 관련 과제에 대한 구체적 대응
 - 대체매립지와 주택공급, 철도 및 도로 등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과제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정책 동향과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다각적인 대응 요구
- 중앙정부 업무보고 중 지역정책과 관련된 과제에 대해서는 각 실·국의 담당부서를 설정하여 인천 연관성을 분석하여 관리
 - 디지털배움터 1,000개소 운영, 공공 와이파이 신규 구축, 읍면동 주민건강센터 확충, 70개 진료권별 지역심뇌센터 지정 및 운영, 국민체육센터 설립 등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는 각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모니터링 및 관리 필요
 - 아이돌보미 광역지원센터나 수돗물 유역지원센터 등 광역행정 사안에 대해서 인천시의 역할과 기능 선제적 검토

[그림 2] 중앙정부-인천시 연관주제 협업·대응 전략



-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에 대해서 인천시 협업 행정체계 구축 검토
 -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은 중앙정부에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처협업 과제로 추진하는 바 인천시에서도 산단의 고도화와 관련하여 도시계획과 지역경제 측면에서 접근
 - 도시계획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장 집적화 정책 등에 있어서는 신규 산업단지 추진을 보다 스마트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쪽의 수요에 맞는 접근 필요
-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형 뉴딜이나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등의 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 추진 동향 모니터링 실시
 -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정책 수혜의 사각지대 발굴 필요
 -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 조성 등 보건복지부 과제 등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확대 조성 과제 연계성 검토
 - 환경부의 지자체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 전처리 및 소각시설 확충 등 매립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법제화 등의 중앙정부 정책 모니터링 지속



발행처 인천연구원 **발행인** 이용식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화** 032.260.2600 www.ii.re.kr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슈브리프를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본 이슈브리프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